

경품 당첨? 무심코 개인정보 넘겼다가 '날벼락'

스팸문자 발신자 둔갑 등 범죄 악용...욕설 문자·항의 전화 받기도 중고사이트·포털 등 잇단 피해...재산 피해 없어 경찰도 '속수무책'

“○○전자 제품기 공기청정기 이벤트” 유명 제조사의 제품기와 공기청정기 각 30대를 내건 이벤트 게시글이다. 지난달 31일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이 이벤트 글을 발견한 김 모(여·49·광주시 남구)씨는 바로 이벤트 참가를 신청했다.

SNS를 통해 “당첨 축하드립니다” 소식과 함께 제품을 받기 위해 이름, 택배 주소지,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통신사 등의 기입을 요구하자 김씨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신청사항을 적었다.

하지만 김씨는 몇 시간 뒤 개인정보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김씨의 휴대전화로 ‘주식 안합니다. 문자 보내지 마세요’부터 갖은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이 지속됐다. 김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각

종 스팸이 발송됐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휴대폰 번호로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오픈채팅방 링크 문자가 불특정다수에게 전송됐다. 김씨는 다음 날 오후 2시에 나주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문의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 등 혐의로 사건접수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결국 김씨는 뚜렷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오랫동안 이용제한 번호를 변경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료나눔’, ‘물품 증정 이벤트’ 등 명목의 상품 증정 이벤트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얻어낸 뒤 도용하는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재산피해 또는 강요가 없어 사기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고, 개인이 대부분 해외IP를 이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있어서다.

온라인 경품행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을 발간했지만 피해는 계속 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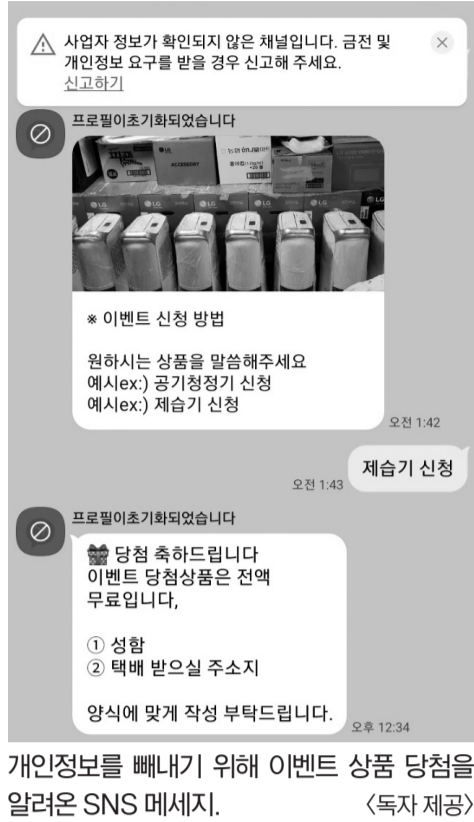
가이드 라인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개인에 주의해야 한다’에 가까운 경고만 담겼기 때문이다. 경찰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정보 사기’에 손을 놓고 있는 틈을 타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에서도 김씨와 같은 피해

를 입은 피해자들이 울린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네이버 블로그는 지난달 24일 블로그에 ‘○○마켓 사기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블로그는 ‘캘럭시탑 재고나눔 이벤트’를 신청했지만 김씨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도용당했고 밝혔다. 이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118(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라는 대답만 돌아와 답답하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도 이같은 수법이 성행하는 것은 알지만 속수무책이다. 결국 개인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공식적으로 인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개인정보를 기재할 때에는 더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이벤트 상품 당첨을 알려온 SNS 메시지. <독자 제공>

“금전 청구 않기로 합의했어도 이혼 후 국민연금 나눠야”

광주지법 판결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를 않기로 합의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전 남편에게 국민연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법원은 아내에게 국민연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A(64)씨와 B(여·65)씨는 1986년 혼인신고를 하고 지난 2014년 합의이혼했다.

A씨는 혼인 기간인 1988년 1월부터 지난 2019년 9월까지 총 208개월(일부기간 단절)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

결별 후 B씨는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 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요청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근거로 들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4일 A씨 연금의 50%를 B씨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A씨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A씨는 2004년 10월부터 가출해 사실상 별거 상태였는데도 B씨가 노령연금 50%를 받아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2014년 합의이혼 시 작성한 금전적 청구를 않겠다는 화해조항에도 반한데다 지급결정이 난 연금 5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부장판사 정영호)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화해조항은 이혼 당사자간의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 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데 까지 적용할 수 없다”면서 “B씨가 이미 지난 2004년 가출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더라도 혼인기간은 최소 16년 이상으로 국민연금 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혹시 폭발물? 탐지견과 수색 전국 관공서 및 철도에 폭발물을 설치한다는 협박 메일이 접수된 17일 광주경찰청 경찰특공대가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광주역 일대를 점검하고 있다. /나영주기자mjna@kwangju.co.kr

계곡에 물막이 시설 불법 설치...어린 형제 ‘큰일날 뻔’

장성경찰, 식당주인·종업원 수사

계곡에 물막이 시설을 불법 설치해 어린이들을 다치게 한 식당업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장성경찰청은 장성 북하면 남창계곡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50대 남성 A씨와 종업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께 남창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B(9)군과 C(8)군 형제가 급류에 휩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형제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한

지름 35cm가량의 파이프 배수관이 열리면서 급속도로 빠지는 물에 형제가 휩쓸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종업원도 피서객들에게 안내조치 없이 배수관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식당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무단으로 파이프 관을 설치해 계곡물을 가두고 장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3~4일에 한 번씩 파이프 배수관을 개방해 물을 교체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 사고를 목격하고 B군 형제를 구조한 뒤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한 광주 송덕고등학교 3학년 이세준(18)군과 김어진(18)군에 대해 표창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선생님이 준 사탕 먹고 배탈’ 초등생 때린 상담교사 벌금형

‘선생님 때문에 배탈이 났다’는 초등학생을 때리고 폭언한 초교 기간제 상담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A(여·6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했지만, 취업제한은 하지 않았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1시께 학생 B군의 명치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B군의 등과 명치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욕설을 하며 “내가 언제 너한테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줬냐”, “니가 소문냈지”, “교

감 선생님한테 사실대로 말하라”고 큰소리 치고 B군을 교무실로 끌고 갔다.

A씨는 교감이 부재중이라 보건실로 가려다 B군이 넘어졌지만 B군의 손목을 끌고 보건선생님 앞에서 “사과를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할 점, B군의 부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 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